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28일

<포럼>

3·1운동정신과 독도 문제 대응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일본연구소장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94년 전 3·1운동의 저항정신과 주권수호의 의지가 새롭게 느껴지는 즈음에, 대신이나 부대신이 아닌 정무관을 보내 한국에 배려한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한국민은 이에 반발해 독도 경비대원 모집에 젊은이들의 응모가 쇠도하고 있고, 충남 천안시소재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도학교를 열기로 했다. 자영업자 소비자연맹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한·일 양국의 맞대응이 식을 줄 모른다.

영토 문제란 본래 어느 쪽도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이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은 냉정하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방영토와 센카쿠의 동일선상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려 하지만, 이는 러시아·중국·남북한 모두를 일본의 반대편에 서도록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현상 변경 시도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스스로 약화시킬 것이다. 현상을 변경할 마땅한 방법을 일본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강한 일본이지만,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를 다시 침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우리 손에 있는 한국 땅이 일본에 넘어가는 건 아니다. 한국도 냉정해져야 한다. 감정적인 과잉대응은 일본의 우익만 더 기쁘게 만들 뿐이다.

독도 수호를 위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도 상책은 아니다. 영토 문제 때문에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반일(反日) 시위로 일본인을 위협하던 중국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한국은 성숙한 시민사회국가임을 일본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경분리 원칙을 우리가 먼저 깨지 않고, 늘어나는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를 우리가 먼저 밀쳐내지 않는 자세로 개방적인 통상국가로서의 국격을 높일 때다.

한·중·일 3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3국은 영토 문제로 인해 협력을 미루는 것이 자국민에게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영토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3국의 지도자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대방에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언어의 사용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자국민이 감정적이 될 때도 정치지도자는 냉정하게 협력을 위한 자세를 호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상대방이 현상 변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해서는 안된다. 작은 행동이라도 현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안겨준다면 민족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다. 상대방이 싫다는 언행은 하지 않으면 된다.

셋째, 그럼에도 영토 문제 관리에 실패해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지도자들이 위기를 최소화하고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지도자 간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을 때 가능하다. 개인이든 국가든 신뢰란 솔직한 대화와 거부감 없는 접촉이 있을 때에만 쌓아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뒤에 숨어서 독도 문제가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소극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새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개진하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적 자세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독도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자세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